



근로자·소상공인 투표 보장 약속

2025. 5. 13.(화) 10:30~11:30 /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오전 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근로자·소상공인 투표참여 보장약속'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광주시-지역경제계, 근로자 투표참여 공동실천

광주시가 지역경제계, 기업들과 함께 근로자의 투표 참여 확대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동 실천에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3일 오전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회의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소상공인 투표참여 약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근로자들이 사전투표(5월 29~30일)나 본투표(6월 3일)에 불이익 없이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하자는 데 뜻이 모아져 마련됐다.
 행사에는 광주시와 광산구를 비롯해 ▲광주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

6월3일 대통령선거 앞두고 기업·단체와 '투표권 보장' 약속
 사전·본투표 불이익 없는 근무환경 조성 위한 협력체계 강화
 강기정 시장 "적극행정으로 더 많은 시민이 더 편하게 투표"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하남·평동·점단산단협의회 등 기업 및 유관 단체 대표 2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자의 주권행사에 대한 존중'이라는 대의 아래 ▲근로자의 투표권 적극 보장 ▲근로자 사전투표(5월 29~30

일)와 본투표(6월 3일) 자유롭게 참여 분위기 조성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 ▲투표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 및 공동체 발전 기여 약속 등 실천사항을 결의했다.
 광주시는 이번 약속을 통해 민주주의가 일터에서도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유도하

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민주적 가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산업·경제 등 광주의 미래 비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특히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일이 근무일과 겹치는 평일인 만큼 기업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광주시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도일 기자

국민 5명중 3명,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찬성' 전두환 신군부 비자금 환수 운동, 10명 중 7명 "필요" 5·18 추가 규명 사안 "은폐·왜곡 대응, 발포 경위 조사" 새 정부, 5·18 관련 당면 과제는 '진상규명' 가장 높아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3명은 차기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학술연구·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67.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특성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의 경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하의 응답자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50대는 76.6%가 수록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20대는 61.2%로 줄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8.1%로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지역은 58.2%로 가장 낮았다.
 아울러 이념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18기념재단이 추진 중인 전두환 신군부 비자금 환수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3%로 나타났다.
 5·18 관련 추가 규명해야 할 사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 은폐·왜곡·조작'이 33.9%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5·18 당시 발포 경위와 책임'(24.2%), '5·18 희생자의 암매장 의혹'(15.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가 5·18 관련 해결해야 할 과제의 순위로는 진상규명(32.8%), 왜곡·왜곡 방지(20.0%),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19.8%) 등 순으로 파악됐다. 5·18 인지도와 기여도, 이미지 등을 모두 종합한 5·18 국민인식지수는 72.9점으로 지난해와 같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로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지역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0%포인트다.
 /이승원 기자

지면안내

- ▶ 이재명-김문수, TK서 박정희 마케팅 3면
- ▶ "유세차 빼" 험지 광주시 고개 못 드는 국민의힘 유세원들 9면

전라남특자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고, 126개 특례를 담고 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전남 체류 외국인 광역비자 발급권 등이다.
 특별법안은 지난해 5월8일, 전남도청

특별법 제정, 언제 어떻게 이뤄지나

11단계 중 6단계 국회 입법공청회서 탄핵·대선 변수 발목
 "조기대선 후 정국 빠르게 안정되면 특별법 가속 붙을 듯"
 강원·전북 사례, 정부 개각 등으로 이르면 내년 제정 전망

서재필실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전남 지역 당선인들과의 첫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절박한 카드로 공식화됐다.
 한 달 뒤인 6월11일, 제42대 전남도 행

정부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특별법안이 정식 회부되면서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전남 국회의원 전원과 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가 공동성명과 결의안으로 지지하고 같은 해 9월 전남TF팀이 꾸려지면서 구제화됐다.
 10월엔 도민 공청회, 11월엔 도의회 특위 설치와 국회 세미나에 이어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면담이 잇따라 진행되며 속도가 붙었다. 전남 출신 3선 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물 흐르듯 진행되던 특별법 제정은 그러나, 12월 불법 비상계엄 후 이어진 숨 가쁜 탄핵 정국과 사법부 소송돌이, 조기

대선이라는 빅 이슈에 밀려 논의가 사실상 6개월째 얼어붙은 상태다.
 하지만 지역 정·관에서는 6·3대선으로 정국이 빠르게 안정화될 경우, 특히 민주당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까지 거머쥘 경우 특별법 제정과 특자도 출범은 오히려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남도는 2, 3단계 대응 전략도 마련 중이다.
 명찰환 행정부지사는 최근 도의회 질의 답변을 통해 "대선 이후에 특별법 제정을 어떻게 할 건인가를 놓고 국회 상

임위원 행안위와 전남 출신 위원장과 심도있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단계, 3단계로 대응하려 한다"며 "강원도나 전북의 경우에도 일단 담아야 될 내용들은 많이 담아 놓되 초기 상황에서는 법 제정이 중요하기에 다소 슬림하게 가고, 그 이후에는 전남에 특화된 규제 완화나 특례 부분을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갈 전략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큰 틀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자도 지위를 우선 획득한 뒤 법률 개정을 통해 특례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2면에 계속)
 /염선호 기자

APEC 2025 KOREA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이 공식광고는 한국인본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